

지역의보에 의원인사 91%

보사부 국감 선거대비 전위조직 의혹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대부분이 친정부·여당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실시된 보사부 국정 감사에서 행정당의 박영숙 의원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2백54개 지역의보조합의 운영위원 5천6백54명 중 91%가 넘는 5천1백여명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보사부 산하 의료보험연합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말 현재 지역의보조합 운영위원으로 있는 인사들의 주요 경력은 읍·면·리장 출신이 1천1백94명으로 21.1%,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5백76명으로 10.2%, 시·군·구 자문위원이 4백3명으로 7.1%,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 3백3명으로 5.4%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평화통일자문위원, 사회정화위원, 민자당원, 군출신 등이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어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의 인사들은 조합 운영에 간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참여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이 정부·여당 지지 인사들로만 이뤄진 것은 정부가 의료보험 본연의 업무보다 각종 선거에 대비한 정부·여당의 전위 조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육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金柱鎬의원(平民)은 "올10월말 현재 현재 의원출구입액수가 5천3백만원대의 불한다"고 말하고 "이런 수입이 원가의 배에 달하는 폭리로 유동과 압출을 질서를 무너시키고 국민들의 의제선호권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가격관리대책 및 수입관리대책의 제시를 요구.

이와 金仁泳의원(民自)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전 주교가 최근에 밝힌 20~30년 지난 舊藥의 화장제를 보사부가 적극 도입,방국민문제로 확산시킬 용의가 없다"고 제하고 "일부병원들이 첨단고가 의료장비를 수용하여 이상으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추궁.

朴英淑의원(平民)은 "올해 초 농촌의 의료보험료가 30~50%씩 인상되고 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 의료보험료도 28%나 인상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과수매가와 일급은 한자리수인상을 고집하면서 의료보험료는 30%씩이나 대폭 올린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공박.

그러나 첫날에 이미 7명의 의원이 주요항안을 밀도있게 "출은"맞이지 열거는 다소 시들한 분위기.

보사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불

原爆피해자 복지센터
7개 도시에서 건설
日측 지원금받아

국내 일본피해자에 대한
日本정부의 지원금으로
년부터 전국 7개 도시에서
건

강북지선터가 세워진다.

金正秀보사부장관은 28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지난 5

월 盧泰愚대통령의 日本 방

문대 합의했던 국내 일본

피해자에 대한 日本정부의

11.29.중앙.

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

다. 보사부가 일본피해자 건

강북지선터 건립을 계획하

고 있는 도시는 원폭피해

자협회 분부 및 지부가 설

치된 서울·釜山·大邱·昌

原·陝川·光州·平壤 등 일

곳이다.

지원을 40억원 가운데 17

억엔이 내년도 日本정부의

예산에 책정됐다"고 밝히

고 이 지원금을 원폭 피

해자 1, 2세에 대한 검

진 및 치료, 건강복지선터 건